

2003년 건설교통부 업무자료

자료제공 : 건설교통부

현안 및 쟁점과제

순위에서 밀려 예산지원이 미흡

교통 및 시설물 안전확보

추진방안 및 조치계획

현황 및 문제점

- 지난 40여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양적개발에 치우쳐 안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와 투자에 소홀
 -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·보완함으로써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
-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
 - 시설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안전기준이 미비하고,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·운영체계 미흡
 - 안전관리 전문인력·조직이 부족하고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심층조사·예방대책을 전담할 조직 부재
- ※ 삼풍사고 이후 보강되었던 안전조직이 정부조직 개편시 축소 조정

(건설안전심의관, 교통안전국 ⇒ 건설안전과, 교통안전과)
- ※ 미국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(NTSB)에서 원인조사 및 대책 전담

(NTSB : 대통령 직속, '74년 설치, 7개 실, 10개 지역사무소, 총 400명)
- 사고예방을 위해 시급한 시설보강도 투자우선

- 단기적인 조치로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 및 보안을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최소화
 - 지하철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
 - 기존전동차(총 6,282량)의 의자·바닥 등을 불연 내장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보완 작업에 착수
 - 지하철외에 지하철상가,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(2003.2~4월)하고 보완조치를 조속 완료
- 중장기 대책으로 근본적인 종합안전대책 마련·시행
 - 민간전문가 중심의 7개 분야 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종합대책 확정
- ※ 7개 분야 : 지하철, 철도, 항공, 육상교통, 도로, 건축, 수자원
 - 분야별로 안전시설·조직·예산 및 안전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
 - 특히, 지하철 및 철도는 차량·역사 등 설비기준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'철도안전에관한법률' 제정을 추진
- 범정부적인 안전전담기구 구성과 연계하여 건교부

내 안전조직을 강화하고, 안전분야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

- 미 NTSB와 같은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 설립 추진

고속철도 개통준비

-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은 2004.4월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와 운영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중
 - 서울~대구간 신선건설과 대구~부산간 기존선 전철화는 금년말까지 공정 98%를 달성할 계획
 -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, 당초 2003.12월 우선개통예정이던 서울~대전 구간도 완벽한 운행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내년 4월에 동시개통
- 서울~목포간 호남선은 기존선 전철화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경부고속철도와 동시에 고속열차 운행
 -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나 분기역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상태 - 분기역 위치는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검토·결정
 - 호남고속철도사업의 지연방지를 위해 서울~화성(향남) 구간은 노선을 우선확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
- 서울~부산(2시간 40분)과 서울~목포(2시간 58분)간 고속철도 운행으로 만나질 생활권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, 물류비 절감은 물론 영호남의 균형있는 발전토대를 구축

철도산업 구조개혁

- 지난 1996년부터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라 자체

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, 적자누적으로 현재제하에서는 한계

※ 매년 6천~7천억원의 영업적자, 1997~2001년 총 3.1조원 누적

- 근본적인 경영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'99.5월부터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추진중
 - 철도시설은 국가가 계속 소유·투자하되, 운영 부분은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운영회사 설립후 단계적 민영화
 - ※ 세계적으로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, 스리랑카, 북한,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
- 이를 위해 구조개혁 관련 3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노조반대 등으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
 - 구조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고속철도의 운영주체 논란, 철도조직의 불안정 등 야기
- 인수위가 제시한 운영부문 공사화 방안을 토대로 노조를 적극 설득하여 금년 상반기중 법안통과에 최선
 - 별도의 운영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이 고속철도개통을 준비 (철도청에 '고속철도운영준비본부' 운영중)

물관리 업무의 효율화

- 물관리 업무는 건교부, 환경부 등 부처별 기능과 정책목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중
 - 건설교통부는 이수 및 치수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해방지를 위한 수량관리에 중점
 - ※ 환경부(수질), 행자부(재해), 농림부(농업용수), 산자부(수력발전)
- 공급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해

- 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물관리 일원화 주장이 제기
- 2011년에는 연간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어 수요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최소한 12억톤은 신규댐 건설로 확보해야 하나, 보전을 중시하는 환경담당부서에서는 추진이 곤란
- ※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서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0%에 불과
-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유역 등의 수해방지를 위해서도 제방축조 등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
- 주거 및 산업단지 조성, 도시개발 등의 국토개발 업무는 용수공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가 함께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
- 물관리 업무를 부처별 기능에 따라 특화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에 대한 '균형' 유지가 필요
- 다만, 부처간 이견 등에 대하여는 총리실의 '수질개선기획단'에서 효율적으로 조정

주요 정책과제

신행정수도 건설 및 국토의 균형발전

-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
- 참여정부 임기내에 신행정수도 부지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, 건설계획 수립 등을 추진
 - 청와대에 설치될 신행정수도 기획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단을 건교부에 설치하고, 상반기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 조사에 본격착수
- 행정수도의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지방분산효과가 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필요
 - 수도권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

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·추진

- 수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집중억제기조를 유지
 - 수도권내 중앙부처의 청사신축 금지, 공공법인의 입지허용범위 축소 등 공공청사에 대한 입지 제한을 강화
 - 다만,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다년단위로 전환하고 경제특구는 총량적용 대상에서 제외

국토의 균형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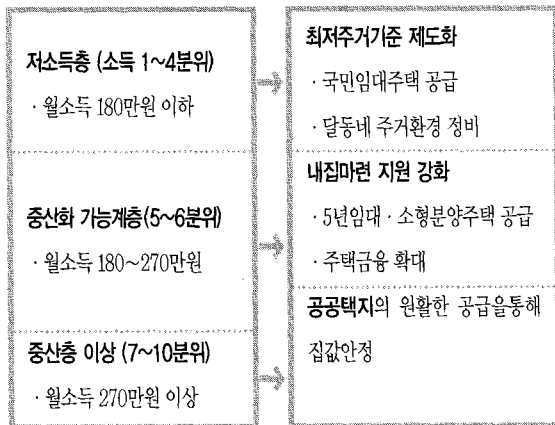
- 행정수도 이전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권역별·도시별로 특성화된 개발전략을 적극 추진
 - 경제특구 개발과 병행하여 전국 8대 광역권개발 계획을 보완하여 지방대도시를 경쟁력있는 '산업별 수도'로 육성
 - 문화·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간선고속도로 주변의 새로운 국토축을 '특정지역'으로 지정, 체계적으로 개발
 -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 등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계획을 금년중 마련
- 지방분산을 선도할 거점도시를 시범 육성
 - 2004년 개통될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아산 신도시를 주거·산업·교육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본격 개발
 -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식약청·국립보건원 등을 이전하여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육성
-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입주가능한 '국민임대산업단지'를 향후 10년간 420만평을 공급(금년중 200만평 조성착수)
 - ⇒ 이러한 균형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

여 향후 5년간의 국토관리방향을 담은 '신국토 관리전략'을 수립

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

주택정책 방향의 재정립

-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으나, 수도권 집값문제나 주거의 질적문제 등은 상존
 -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90%(서울 83%)수준으로 집값·전세값은 여전히 불안한 실정
 - 서울지역 집값은 작년엔 22.5% 상승하고 금년 3월 들어서도 봄 이사철 영향으로 매주 0.2% 내외 증가
 - 330만 가구(전체가구의 23%)가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살고 있고, 이중 112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
 - 최저주거기준 : 3인가구의 경우 8.8평 이상, 방 2, 전용 화장실
 - 1인당 주거면적(평) : 한국 6, 미국 17, 영국 12, 일본 9
-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확립 필요



중점 추진과제

-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
 - 국민임대주택을 금년에 8만호(5년간 50만호) 건설하고, 택지부족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
 - ※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, 각종 부담금 및 조세감면 근거마련
 - 무주택 서민·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하고,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(6,225억원→1조원)
 - 486개 달동네에 대해 도로, 상하수도, 공원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, 이를 위해 금년중 3천억 원을 지원
 - 주택보급률외에 최저주거기준 등 질적수준을 반영한 주거복지지표를 정책지표로 도입하고,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'주거복지종합계획'을 금년 상반기중 수립
- 수도권의 집값안정을 위해 매년 30만호이상을 건설하고, 이를 위해 약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개발·공급
 - 판교신도시를 조속히 개발하고, 금년 상반기중 2~3개의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
- 집값동향을 매주 점검하고,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차단

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

-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위해서는 물류기지화가 필요하며 우리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있는 물류비 절감이 절실
 - 물류비 감축목표 : GDP대비 12.9%(2000년)⇒

10%(2010년)

- 공항·철도·도로 등 물류기반 SOC를 대폭 확충
 -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(활주로, 화물터미널)을 본격 시행하고, 제2연육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본설계에 착수
 - 경부고속철도(금년중 1단계 개통준비)·호남고속철도를 차질없이 건설하고, 기존 철도망을 복선화·전철화
 - ※ 금년중 호남선·충북선 전철화 완공, 중앙·경춘선 복선화 추진
 - 금년중 영동고속도로 등 3개 구간(79km)을 확장 개통하고 2020년까지 남북 7개, 동서 9개축의 간선도로망을 구축
 - 2010년까지 전국 5대 권역에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완료하고, 전국 10대 권역에 유통단지(금년 울산·대전)를 개발
 - ※ 중부권 및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사업시행자를 금년중 모집
- ⇒ 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운영예정인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계속 존치
- 민관합동의 '물류비 감축 특별작업단'을 구성하여 수송 물류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·추진

도시 교통난 완화

- 그동안 인구는 대도시로 집중되는데 비해 교통투자자는 고속도로·국도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시교통문제 개선이 미흡
- 지하철 위주의 재정지원을 경전철·버스 등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

- 도시지역 도로의 경우에도 간선기능 확보에 필요한 순환도로, 연접도시간 도로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방안을 강구
-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주차난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
 - 상시적인 혼잡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장 이용제한, 버스전용차로 우선설치 등 집중관리
 - 교통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
 -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확보기준강화,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
-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
 - 용인 등 수도권 남부에 9개 도로 및 3개 전철을 2008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하고, 수도권 북부 및 서남부지역에 대하여도 광역교통대책을 금년중 수립
 - 대도시 외곽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방지를 위해 '선 교통시설공급, 후 도시개발' 원칙을 확립

친환경 개발과 국민참여 확대

- 개발을 우선한 국토관리에서 탈피하여 '환경없이 개발없다'라는 원칙하에 '선계획-후개발' 체제를 구축
 -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전국토를 보존할 땅과 개발할 땅으로 구분하고, 보존할 땅은 철저히 보존
 - 개발가능한 땅은 도로·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, 경관·환경심의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
 - 도로·철도·댐 등 사업유형별로 자연생태계

복원기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기준을 전면보강

○ 입지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환경전문가,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도중의 환경논란을 최소화

- 건교부내에 전문가,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'환경검토자문단'을 구성하여 주요사업 및 계획 수립시 자문

□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참여를 확대

○ SOC 등 예산편성 과정에 연구기관·시민단체를 참여

- '예산자문위원회'를 구성(4월중)하여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

○ 건축·토지이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인터넷 정책제안을 활성화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

○ 안전한 국민생활여건을 조성하고, '개발과 보전의 조화'라는 원칙하에 쾌적하고 편리한 국토를 만들어 나가면서,

○ 동북아 물류기지화, 국토의 균형발전, 서민주거안정, 도시교통난 해소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

